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최 은 석*

목 차

- I. 머리말
- II. 북한의 저작권 보호 실태와 법제의 내용
 - 1. 북한에서의 저작권 보호 실태
 - 2. 북한의 저작권 보호 관련법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
 - 3. 북한 내에서의 남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 III.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적 문제
 - 1.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 실태와 법적 문제
 - 2. 북한 저작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태도
- IV. 남북한 저작권 관련법제의 비교
 - 1.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비교 분석
 - 2.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문제
 - 3.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저작권 보호의 전망
 - 4. 남북한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방안 모색
- V. 맺음말

I. 머리말

분단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1990년까지도 남한¹⁾에서 북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의 저작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소유하기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일반인도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의 저작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북한의 저작물을 접하기는 수월하지 않음 또한 현실이다. 어쨌든 남북한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있음에도 두 체제는 각기 많은 저작물들을 축적해 왔다. 이로써 남과 북의 주민들은 문화 및 예술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²⁾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발명,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이 부동산 등 유형재산에 못지않게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재개되어 활성화되면 재화의 교역과 함께 지적재산의 교류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북한 저작물의 경우는 반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그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³⁾

최근 남북한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지금까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 중개업체⁴⁾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입수되어 오던 북한자료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기관, 단체, 혹은 개인 누구나 국내에 반입하여 자료를 공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관이나 단체는 소관부처를 통해 특수자료⁵⁾ 취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면 북한자료의 입수 및 관리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통일부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반입금지품목이 아니면 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으로 다량 반입, 시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가 북한으로부터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1년 4월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⁶⁾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1)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대한민국'의 공식명칭을 '남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칭을 '북한'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박태운,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2002, p.1.

3) 이은정, "남북교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법원행정처, 2002, p.108.

4) 국가(소관부처)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들로 2003년 5월 기준, 남북교역(주), 아시아 저널(주), 오피플닷컴(주), 월 트레이드(주) 등을 들 수 있다. 정분희,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p.164.

5) 특수자료라 함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이념성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특수자료와는 상당히 의미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북한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⁷⁾에 가입을 계기로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남북한간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I에서는 북한의 저작권 보호 실태 및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다룬다. III에서는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북한 저작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입장을 고찰한다. IV에서는 남북한 저작권 관련법제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남북한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며, 마지막 V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II. 북한의 저작권 보호 실태와 법제의 내용

1. 북한에서의 저작권 보호 실태

(1) 북한의 문화활동 현실과 저작권 정의

저작권 논의의 대상은 지식이다. 지식은 문화의 일부이다. 문화는 역사와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⁸⁾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 보호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문예활동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어떤 시각으로 저작물을 대하고 있는지, 창작자가 창작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 접해 있는지 관

6)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은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수교를 통해서 대외무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경제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특히 21세기의 주된 산업부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구축에 의한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한 투자자들이 북한의 정보기술산업분야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 북한에서 저작권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면, 안심하고 지적재산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성”, 『법학연구』 제11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p.77.

7)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국제문예가협회(International Literary and Artistic Association)가 발전해서 생긴 협약을 1886년 9월 9일에 체결, 비준 절차를 거쳐 1887년 12월 5일에 발효되었다. 베른협약의 특징할 만한 내용은, 첫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조약이 적용된다는 소급효의 원칙이 있다. 셋째,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보다 적지 않은 기간으로 할 것이 각 동맹국에 의무 지워져 있다.

8)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p.245.

찰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의 저작활동과 저작권제도는 시장경제에 근거하며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북한의 저작권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에 근거하며 단체 및 기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저작권에 관한 정의에 대해 북한의 「법학사전」 설명을 보면, “과학, 문학 또는 예술의 창작품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저작권의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품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번역하였거나 독창적인 배열방식으로 편찬한 사람도 저작권자로 된다”고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참가자들이 모두 저작권자로 된다”는 것이다.⁹⁾

남한에서의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유 직업인으로 작품의 창작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작품의 내용과 구성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완성된 작품의 이용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전문적인 창작인들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된 정맹원이며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다.¹⁰⁾ 북한은 집체창작 개념을 가지고 저작물을 만든다. 집체창작조는 함께 모여 구성 및 구상을 하며 그것을 해당 참가 인원의 수대로 나누어서 창작시켜 초고를 만든다. 그 후에는 집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완성시킨다.¹¹⁾

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p.418.

10) 북한에는 사회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 이는 ①정부행정부, ②당중앙위원회, ③대중단체(작가동맹이 여기에 속한다)인데 북한의 작가는 이 ①②③ 가운데 한 곳에 소속되어, 소설을 쓸 경우 작가동맹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가동맹에 소속되면 의복, 식량, 주택 등을 배정 받고 월급 또한 자기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받는다. 출판할 때도 행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이고 작가동맹의 임의 허가로 가능하다. 작가동맹에는 정맹원과 후보맹원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 그들은 의식주의 공급·보장 외에도 작품 집필에 대한 원고료를 따로 받는 한편 단행본의 발행에는 ‘판권에 대한 고료’, 즉 인세가 지급되며, 정맹원이 아닌 이는 정맹원의 절반의 원고료를 받는다고 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작가동맹 맹원이면 공장에서 받고, 행정부 소속이면 행정부에서 받고 당중앙위원회 소속이면 당중앙위원회에서 받는다. 정부 결정으로 작가 활동만 하면 2년이면 3년이면 집필하는 기간은 충분히 준다. 사망 후 개인은 전혀 저작권이 없다. 즉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작가동맹에서 전부 권리를 갖는다. 모든 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이다. 박현숙,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년 봄, p.26; 한승헌, “남북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 상호보호 방안”,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년 겨울, p.59.

11) 북한 작가들의 창작 방식은 집체창작을 취하고 있다. ‘집체창작’이란 다른 모든 부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면,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사상 예술적으로

(2)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문예이론'으로 강조

북한에서는 예술의 본질적 특성과 이념을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으로 본다. 인민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문예관으로부터 비롯된 예술의 기본 이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변형하여 문예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¹²⁾ 북한의 예술은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유일하게 옳은 자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선택도 있을 수 없는 오직 김일성 유일사상과 당의 정책과 지도에 의해서 창작되는 철저한 체제 종속의 예술이 되었다.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 및 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문예총이 있다.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북한의 모든 작가 및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작가 및 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주체의 구성과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¹³⁾

북한에서 과학,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는 과학연구사업과 문학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로 설명된다. 즉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는 과학연구사업과 문학예술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민의 권리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⁴⁾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기원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시작된 항일혁명투사들의 집체적 창작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문예예술사전」, 과학백과출판사, 1972, p.792;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91, p.337.

12) 예컨대 Marxism과 저작권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저작권 법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노동을 중시한 막스경제학과 노동을 재산권 정당화의 요소로 보았던 Locke의 노동이론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지적 고리가 있어 보인다. 막스는 개인의 창작행위는 사회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노동의 결과인 지적산물은 당연히 사회적인 것으로서 사회에 속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고 한다.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앞의 논문, p.268.

13) 이찬주, 「북한의 문예정책」, 통일로, 1998.7, pp.77~81.

2. 북한의 저작권 보호 관련법제의 특징과 주요 내용

(1) 저작권 보호 법제의 연혁과 배경

북한에서 저작권법의 제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며 1958년도 제2차 민법 초안에서는 저작권 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할 것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당책을 입법 논의는 소련법을 마한 제반 공산권 국가들을 법률을 계수하는 차원에서 민법 초안에 저작권에 관한 것을 포함시켰으나, 1979년대 들어 . 당책을 법 부문에 도입되자 종전의 소련법 계수 입장에서 벗어나 독창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기 시작했고,¹⁵⁾ 그 결과 몇 부분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이다.¹⁶⁾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북한은 이미 1948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국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 후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60조에서 “국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다. 1992년 사회주의헌법은 제74조에서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 의 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98년 사회주의헌법 제74조에서는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 의 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 권, 특허권¹⁷⁾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저작권 보호 문제는 작품의 출판, 공연, 방송, 전시 등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는 점이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출판물

14)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앞의 사전, p.120.

15)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 그 이념적 토대인 Marxism은 Locke의 노동이론과 연결되어 저작권을 자연권적 전통에서 보지 않고 다분히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것을 국가에서 법상 선언함으로써 굳이 분류하자면 공리주의 전통에 의한 성 문법상의 권리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앞의 논문, p.269.

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연구자료 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12. p.33.

17) 북한의 ‘특허권’은 1998년 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신설 추가되었다.

에 대한 가격결정도 국가의 지정에 의한 것이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다.¹⁸⁾ 또한 국가가 공연 및 출판에 대하여 감독 및 검열을 한다. 북한의 작품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에 따라 작품을 공개하고 일반인이 그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문화 예술인들은 국가가 정해진 과제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든 만큼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해도 그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면 그 권리는 사회적 소유 또는 국가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사실상 저작권 행사는 국가 및 저작자 단체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2) 북한 사회주의법의 특징과 저작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북한법의 기본적 성격은 사회주의법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입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법이 갖는 성격은 무엇인가에 물음을 갖게 된다. 사회주의법원리는 변증법적 원리가 보여주듯이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초기와 완성기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는 각각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²⁰⁾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에 의하면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즉, 법은 본질적으로 계급의사의 표현이며,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무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은 순수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의 내재적 가치나 윤리의 문제

18)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특징으로 사유재산권과 가격제도를 들 수 있다.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는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소유)와 계약에 의한 그의 자유로운 이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이며 모든 재화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에 속한다. 재산권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아무리 작은 재화에 대해서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에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는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순수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육소영, “남북한의 저작권 보호체계와 북한 저작물에 관한 법적 문제점”,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법원행정처, 2005, p.228.

19) 박태운, 앞의 논문, p.57.

20)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북한법연구회, 2003, p.21.

또는 법의 독자성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의 이념으로 삼는 정의는 정치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지 법에 의하여 실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적 안정성도 크게 중요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법학의 과제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 법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부르조아법학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비판하는 것이 되면 법학이 이데올로기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²¹⁾ 그리하여 북한의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입법 기술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제16조),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여 양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여(제13조, 제15조, 제21조), 저작권에서의 사유재산권리를 인정하였다. 종전에는 개인에게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저작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저작권법상 명시적으로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제28조), 북한의 경우 대부분 집체창작을 권장하고 있으므로²²⁾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²³⁾

(3) 북한 저작권 보호 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1) 저작권법

가. 기본원칙

「저작권법」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

21) 위의 논문, p.21.

22) 북한저작물 중에는 집체작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작가들의 작품생산을 수공업적인 형태에서 공업화한다’고 소위 ‘대창작 구루뻔’까지 만들어 집체작을 권장하였다. 1970년초 이후 북한의 문학사에서 작가들의 등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문학 이외의 미술에서도 1970년대 이후 창작자명이 없는 그림이나 조각이 전체의 80% 이상 차지할 만큼 집체화, 집체조각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상호,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p.2; 이은정, 앞의 논문, p.129 각주 25) 재인용.

23) 이은정, 위의 논문, p.129.

택되었으며,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되었다.²⁴⁾ 개정 법률에서는 제12조만을 부분 개정하였는데, 2001년 법률에서는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를 2006년 법률에서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법률문건을 포함한 기타 국가문건들에 대해 상업적 영리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시장적 요소를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조항마다 내용의 소재목을 병기하였다.

이 법은 모두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북한은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제2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저작물의 리용 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제3조) 강조하고 있다.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를 보호”(제4조)하도록 한다. 나아가 북한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제5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저작권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역설한다. 그리고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제7조)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어 북한의 국제조약에 대한 가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6조).

나. 대 상

저작권의 대상은 해당기관이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정하는데(제8조),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①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②음악 저작물, ③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④영화, 텔레비존 편집물

24) 그동안 북한 저작권법은 2002년에 한번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p.85 참조;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저작권법은 2006년 2월 개정된 것으로 북한 원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부문)」, 평양: 법률출판사, 2006, pp.498~509 참조.

같은 영상저작물, ⑤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⑥사진저작물, ⑦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⑧컴퓨터프로그램²⁵⁾ 저작물이다(제9조).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제11조).

다. 저작권자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로,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제13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①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②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③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제14조)가 주어진다.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①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②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③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운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④저작물을 편집할 권리이다(제15조).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지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제16조).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며, 공동 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제17조).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 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제19조),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가지고,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제20조).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제21조).

25)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라. 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제24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제25조).

마. 저작물의 이용과 제한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제26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제28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제31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①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②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③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④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이용할 경우, ⑤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⑥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⑦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⑧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⑨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이다(제32조).

바.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이며,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는 이용한 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제33조).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한 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제34조). 저작물을 이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물을 제작한 자는 그것을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도 있다(제35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까지이며,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다(제38조). 저작인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제39조).

사. 북한 지도기관의 통제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제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44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제46조).

아. 저작권 분쟁해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²⁶⁾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²⁷⁾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48조).

26) 북한 저작물의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 '북한 저작물 분쟁사례' 참조.

27) 북한은 중재와 관련한 법률로는 「중재법」(1995.3.1 채택)과 「대외경제중재법」(1999.7.21 채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법은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에 대해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내에서 남한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북한이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중재법을 통해 얼마만큼의 분쟁사건을 해결했는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²⁸⁾은 저작권과 관련한 규정을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저작권보호와 컴퓨터이용질서를 어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컴퓨터망보안질서를 어겼거나 기억매체에 기억되어있는 중요정보자료를 파손시켰거나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비루스²⁹⁾를 류포시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제104조)고 하였다. 출판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 보급, 반출입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제105조)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형 법

북한은 저작권과 관련한 형사범죄 조문을 1999년 「형법」에서 처음 규정하였다.³⁰⁾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몰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99년 형법 제98조)고 하였다. 2005년 「형법」³¹⁾에서는 ‘저작, 발명, 창의고안 몰살죄’에 대해서는

28) 2004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6호로 채택되었다.

29) 우리의 ‘바이러스’를 말한다.

30)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된 바 있다. 그 후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다시 채택되었으며,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수정보충,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되었었다.

31) 북한 형법은 1999년 8월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입수된 전문은 2005년 7월 개정전문이 마지막 자료이다.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되었다. 2008년 형법t일 분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미입수 상태이다. 다만, 200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이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되어 최근 공개되었다.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99조). ‘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에 대해서는 “리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00조).

4) 손해보상법

「손해보상법」³²⁾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저작권 침해의 보상’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실을 준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저작물을 심의, 편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모방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한다”(제36조)라고 하여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

5) 대외민사관계법

「대외민사관계법」³³⁾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제1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소유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제2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이 법은 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되었으며,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되었다.

33) 이 법은 1995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로 채택되었으며,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되었다.

6) 기술수출입법

「기술수출입법」³⁴⁾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술의 수출입대상에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술과 상표, 공업도안, 과학기술저작, 기술비결 같은 것이 속하며, 당국은 기술의 수출입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기술수출을 늘여나가도록 해야 한다(제2조).

7) 과학기술법

「과학기술법」³⁵⁾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 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제1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학위, 급수박탈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다. “과학연구 결과를 과장하였거나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급수를 사정받았을 경우에는 박탈한다”(제61조).

8)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³⁶⁾은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제1조)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였다(제2조). 저작권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신의주특별

34) 이 법은 1998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9호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되었다.

35) 이 법은 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1999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200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수정보충, 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되었다.

36) 이 법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채택되었으나, 「신의주기본법」 제정 당시 ‘신의주행정특구’ 초대 양빈 장관이 중국 공안에 전격 연행·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신의주는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빈 장관은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한 후 신의주특별행정구 행정장관에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바 있다. 「연합뉴스」, 2002년 9월 29일.

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제5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북한 내에서의 남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

그동안 남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는 주로 남한내에서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논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하지만, 남한의 유명 가수들과 남북 체육행사가 북한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만큼 남한 저작물의 북한 내 사용에 대한 분쟁문제도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³⁷⁾ 일례로 1999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최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남북 스포츠팀이 육로를 통해 이동한 뒤 평양에서의 경기는 지난 2003년 10월 열렸던 남북통일농구대회³⁸⁾ 및 남한의 인기가수인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남한과 북한의 매스컴을 통해 동시에 방송이 중계되기도 하였다.

이런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이날 공연이 판매용음반으로 녹음 제작되어 남한에서 이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연자인 조용필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 이용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조용필의 공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조용필에 대한 보상없이 얼마든지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남한과 북한의 저작권법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³⁹⁾

37) 그간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사용’에 대해서는 소수 학자들이 논의를 제기하였던 반면, 이와 같이 ‘남한 저작물의 북한 내 사용’으로 인한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전혀 논제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 제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제607호, 법조협회, 2007, p.184.

38) 2003년 10월 당시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을 위해 1000명이 넘는 남측 관계자들이 버스 74대로 판문점을 넘어가는 대규모 방북행사가 성사되면서 선수단과 체육인들도 버스로 평양을 방문했다. 하지만 2002년 9월과 2005년 8월 국내에서 열린 통일축구대회 때는 북한 선수들이 비행기를 통해 남한을 방문하는 등 육로 방문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39)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III.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적 문제

1.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 실태와 법적 문제

(1) 불가사리 사건

북한 저작물의 경우는 1988년 7월 19일 월북작가 작품들의 해금 조치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월북작가의 작품을 출판하였고, 북한 원전도 정치, 철학, 경제, 역사, 문학 등 제반 분야에 관하여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북한과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한 몇몇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단복제의 형태로 출간되어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음반은 1000여 곡의 남·월북 작사·작곡가들의 작품이 원곡 그대로 또는 개작·개사되어 유통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반입되기 시작한 영상물은 영화 이외에도 만화,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 종류가 수입 또는 반입되어 있다.⁴⁰⁾

북한 영화 ‘불가사리’는 신상옥 감독이 1976년 납북되었다가 북한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에서 제작된 것으로 신상옥 감독이 북한을 탈출하자, 북한 영화계에 거장 정진호 감독에 의해 1985년 완성되었다. 법원은 “신감독은 제작진의 일원으로서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권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방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1987년 개정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감독 등 제작진에 대해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영상저작물의 수입, 방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즉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인 북한의 신필름 촬영소에게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⁴¹⁾

가?-, 앞의 논문, pp.179~180.

40) 조수선, “남북한 저작권 협력 문제를 위한 단계별 정책방안”, 「북한학보」 제25집,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2000, pp.3~4 참조.

41) 「연합뉴스」, 1998년 12월 2일; 박상미, “남북한 출판물 교류를 위한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9권 제1호, 출판문화학회, 2001, p.241.

(2) 이조실록 사건⁴²⁾

‘리조실록’은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1954년부터 국역사업에 착수하여 4백권으로 번역해 낸 책이다. 이에 남한의 여강출판사 대표 이순동이 정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허가를 받아 1992년 1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와 남한에서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출판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아름출판사(대표 윤영환)는 위 연구소의 허락 없이 ‘리조실록’의 번역본을 입수하여 무단으로 복제·출판하였다. 이에 여강출판사는 이 출판사를 상대로 ‘리조실록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합의(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1993년 11월 9일 여강출판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북한의 저작물도 남한의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고, 1994년 2월 14일 재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⁴³⁾

(3) 북한 저작물의 진정 권리자 확정의 곤란

북한 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작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국가에 의해 설립된 일정기관에 소속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저작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민이 북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북한주민과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당사자가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중계약 등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남한주민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호받기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민이 일본 등의 제3국을 통하여 구입한 북한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북한 정부 등이

4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2. 14, 93카합2009 결정.

43) 박상미, 앞의 논문, p.241.

저작권 침해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북한정부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도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⁴⁴⁾

2. 북한 저작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태도

저작물 보호는 처음에는 양국간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86년도에는 다국간 협약인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⁴⁵⁾이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의 주동으로 체결되었으며 지금까지 이 협약은 국제적인 저작권보호제도의 증진을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저작권 보호수준이 높고 저작권보호상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주국가나 보호 수준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세계저작권협약’(UCC)⁴⁶⁾이 1952년에 체결되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 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내국민 우대의 원칙이다.

44) 육소영, 앞의 논문, p.245.

45)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WIPO)에 남한보다 5년 먼저 가입하고, 1980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PCT), 1993년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2003년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차례로 가입했다. 2000년부터 매년 4월 26일을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제정하고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노동신문』, 2001.4.20. 참조). 특히 김정일은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하면서 정보기술과 컴퓨터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최단 기간 내에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46)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은 미국을 비롯한 남북 아메리카 제국이 가입해 있는 Pan-America 협약이 베른협약과는 달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는 저작권의 발효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주의를 택함으로써 국제저작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의 하나인 미국이 오랫동안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또 베른협약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선진국들의 입장에 치우쳐 보호 수준이 점차 높아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 가입을 꺼리게 되는 이유로 1952년 제네바에서 열린 50개국 대표들의 외교회의에서 세계저작권협약으로 체결되어 1955년 9월에 발효되었고, 1971년 파리 국제회의에서 개정되었다. 이 협약은 방식주의에 있어서 ©기호만 표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보호의 수준을 베른협약보다는 낮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나라의 가입을 유도하였다. 박태윤, 앞의 논문, p.10 각주 13.

어느 한 가입국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은 다른 모든 가입국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과 같은 정도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분단의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저작권을 정책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호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북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⁴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북한 저작물 무단출판에 따른 가처분사건에서 월북문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사건,⁴⁹⁾ 월북문인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금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월북문인의 저작권 인정사건,⁵⁰⁾ 북한 이조실록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사건에서 저작권 인정,⁵¹⁾ 북한 이조실록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형사 유죄 인정 사건,⁵²⁾ 월북문인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저작권 인정⁵³⁾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리 나라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상호주의도 북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⁴⁾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설사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⁵⁵⁾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양도가 있는 이상 북한의 양도 주체가 우리 법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단체로서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라고 하였다.⁵⁶⁾

또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서 귀책사

47) 박태윤, 앞의 논문, pp.10~11.

48)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연구」 제3호, 북한법연구회, 2000, p.117.

49) 서울민사지법 판결 1989.7.26. 89카3962.

50) 대법원 판결 1990.9.28. 89누6396.

51)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4.2.14. 93카합2009.

52) 서울지법 판결 1996.9.12. 96노3819.

53) 서울지법 판결 1998.7.26. 89카13692.

54) 이와 관련한 판례 분석에 대해 자세히는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앞의 논문, p.117 이하 참조.

55)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4.2.14. 93카합2009;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한 바 있다.

56) 위의 판결.

유가 있는 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귀속될 뿐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여 북한과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북한과의 이행 여부에 불문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북한의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거의 전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⁵⁷⁾

상속의 경우에도 월북작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⁸⁾

그러나 법원은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우리 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로 헌법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남북한이 서로 주권 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될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였다.⁵⁹⁾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남한의 저작권법이 북한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내려질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북기본합의서」⁶⁰⁾나 그 부속합의서가 서명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⁶¹⁾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제3장 부속합의서」)⁶²⁾는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9월 17일 남북대표단이 합의 서명하였다. 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

57) 위의 판결.

58) 서울민사지법 판결 1989.7.26. 89카3962; 대법원 판결 1990.9.28. 89누6396.

59) 서울민사지법 판결 1989.7.26. 89카3962.

60) 「남북기본합의서」로 불려지고 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에 서명되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7일 서명되었다. 위의 두 합의서는 남북을 대표하여 남측의 국무총리와 북측의 정무원 총리가 서명하였다. 이 합의서는 모두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하기로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설명에 관하여 상세히는, 「『南北基本合意書』 解説」, 통일원, 1992 참조.

61)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앞의 논문, pp.117~118.

62) 「제3장 부속합의서」는 제1장에서 경제교류·협력,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제4장 수정·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속합의서는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다(제1조).

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⁶³⁾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제9조). 따라서 남과 북은 이미 남북 쌍방이 합의에 의해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그러한 합의가 없으나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조치가 생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IV. 남북한 저작권 관련법제의 비교

1.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비교 분석

북한은 헌법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67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표현자유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출판권의 통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표현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도 개인적 창작행대상인결과이기보다는 작가 등의 예술가, 문학가들이기보가에서 조직한 일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창작행태를 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북한 저작물의 권리관계는 저작자 개인 중심의 우리 저작권 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⁶⁴⁾

남한법과 비교해서 그 보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의 보호기간에 있어서 그 보호기간은 우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산점이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로 그 기산점에 차이가 있다.⁶⁵⁾ 북한의 저작권은 대상에 ‘건축저작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⁶⁶⁾ 저작재산권에 ‘공중송신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⁶⁷⁾ 질권설정제도,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인

63) 남북한 출판물 교류와 관련하여서는 박상미, 앞의 논문 참조; 전영선,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 『아태지역동향』 제159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참조.

64) 육소영, 앞의 논문, p.229.

65) 우리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은 공표시가 아니라 창작시가 그 기산점이 된다.

66)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5호에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접권의 등록, 실연자 단체 및 음반제작자 단체의 보상권, 출판권 설정 등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⁶⁸⁾

또한 저작권 사용료를 북한의 가격제정기관이 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이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제32조) 또한 넓다. 특히 제32조 제4호에서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2. 남한에서 북한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문제

남한에서 북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북한 자체에 저작권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집체창작이 많고, 개인이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단체명으로 공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단체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면 북한 저작물의 보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보호 대상은 북한주민의 저작물이나 북한 주민의 자발적으로 설립한 법인 내지 단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권의 공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상호 보호 하에서 북한의 집체창작물, 특히 단체명의 저작물을 보호할 경우 그 보호기간은 공표시점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언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셋째, 저작권자의 생사 및 소재 파악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북한 저작물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저작자의 생사 및 소재파악에 관한 정보이다.

넷째,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를 찾기 어렵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저작자는 북한의 어느 한 개인일지라

67) 우리 저작권법 제18조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68) 우리 저작권법은 제2장 제7절에서 ‘출판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57조~제63조).

69) 이은정, 앞의 논문, p.13.1

도 그 권리는 북한 정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간매개인을 거쳐 저작권 거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저작권자와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복허락’과 같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또한 북한 저작자는 남한의 저작권 계약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 허락, 단순 허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여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북한 원전이 무단 복제되었을 경우 그 저작자인 북한 주민이 직접 민·형사상의 고소를 우리 법정에 제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섯째, 남북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법이 매우 어렵다. 저작권 침해 당사자들이 각각 상대측 사법기관에 권리의 구제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간의 저작권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의 어려움이 뒤따른다.⁷⁰⁾

3.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저작권 보호의 전망

북한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저작권과 발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20조)는 규정을 둔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별 부문법의 입법은 2001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하게 되었다.⁷¹⁾

반면, 남한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1986년에는 구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1987년 10월 1일에는 세계저작권협약과 동년 10월 10일에는 이른바 음반보호협약이 발효되어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70) 박태윤, 앞의 논문, pp.111~112.

71) 이 법이 입법되기 2001년 전까지 북한은 사권(私權)으로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단행법(저작권법)도 없었고 북한 민법전에도 저작권편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았었다.

있고, UR/TRIPs협정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⁷²⁾을 하기에 이르렀다.⁷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발효는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저작자의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본다. 더구나 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는 남북저작권의 구체적 보호방안 없이 보호의 원칙만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저작 문화활동과 저작권제도는 자유경제의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북한의 문예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작권제도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주체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창작인들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가의 산하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대부분이고, 조직적 관리 속에서 창작된 저작물 또한 개인들에게 그 권리가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집체창작의 경향까지 보임으로써 저작권자의 성격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산하단체에 권리가 독점되어 있으므로 창작의 대가 또한 저작물의 사용 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창작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⁷⁴⁾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의 차이로 인해 남북저작권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⁷⁵⁾

72) 한국의 저작권법은 1957.1.28. 제정, 1986.12.31. 전문개정, 부분개정 중략, 2006.12.28. 전문개정, 부분개정 중략, 2009.4.22까지 17차 일부 개정되었다. 법제처 사이트(<http://www.moleg.go.kr/>, 검색일자: 2009년 11월 4일) 참조.

73) 김성중, 앞의 논문, p.105 참조함.

74) 필자가 2003년 10월 6일~9일까지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관단 일원으로 방북하였을 때, 10월 8일에 평양에 있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북한 창작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창작자의 창작의 대가가 별도 지급되지 않고 일률적인 보수로 지급됨을 알 수 있었다.

75) 통독전 서독은 동독인의 저작권을 서독기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서독인의 저작권과 동등하게 보호하였고, 동독은 서독인의 저작권을 베른협약의 동맹국의 입장에서 보호를 하였다. 그리고 동·서독은 1986년 5월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저작권의 상호보호를 더욱 심화시켰다. 동·서독의 문화협정과 저작권보호에 관해 상세히는 이장희, “남북한 학술교류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년 겨울호, pp.35~38;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년 봄호, pp.35~37.

4. 남북한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방안 모색

(1) 남북 간 공동협의기구 구성

정부 내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한이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남북 간 공동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입법조정 권고 및 섭외사법문제의 해결기능까지도 포함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저작권보호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저작권에 관련된 일체의 조사, 사실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저작권의 위탁관리, 중개, 대리 등까지 맡겨 남북이 함께 공동위원회 형태의 단일 중앙기구를 두거나 남과 북이 각각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⁷⁶⁾

비록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저작물이 보호될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향후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당국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는 당국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남북한간에 저작권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남한은 북한과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통지사향대로 남한 민간교류단체인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⁷⁷⁾을 통한 협의 채널 상태가 과도기적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협의 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며 당국간 협의 채널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물론 경문협이 저작권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한 대북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 조수선, “남북한 저작권 협력 문제를 위한 단계별 정책방안”, 『북한학보』 제25호, 북한학회, 2000, p.205.

77) 경문협의 저작권 교류사업에 관하여 자세히는 경문협 홈페이지(<http://www.interkorea.org>, 검색일자: 2009년 6월 20일) 참조 바람.

따라서 남북한 저작권 통합기구를 설치, 당국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의거, 상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합차원에서 양국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게 될 도서관의 역할을 고려, 도서관에서 북한자료의 이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북한저작물의 전송·복제 등의 문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법, 저작물 집중 관리기구 설치 등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⁷⁸⁾

(2) ‘남북저작권신탁관리공사’(가칭)의 설립

현재 남북저작권 교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저 북한 저작권에 관한 제반의식 고취의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부에 허가를 얻어 민간차원으로 구성하여 남북공동법인의 ‘남북저작권신탁관리공사’(가칭)⁷⁹⁾를 설립하고, 남한측 법인은 북한저작물에 대하여 남한에서 북한저작권을 대리·중개 및 신탁관리하도록 하며, 북한측 법인은 남한저작물에 대하여 북한 내에서 남한저작물을 대리·중개 및 신탁관리하도록 하여 남북한저작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남북저작권 교류의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⁰⁾고 본다. ‘남북저작권신탁관리공사’(가칭)가 설립될 경우 북한저작물의 내용과 종류의 구분, 저작권자의 생존 여부확인에 의한 보호기간 산정문제, 가족이 남한과 북한에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가족이 남한건 북한에만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저작권신탁관리공사’(가칭)는 저작물 및 저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남북당사자 사이의 직접 계약에 의한 시간과 경비 절감, 저작권계약 대행으로 인한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의 이행감

78) 정분희, 앞의 논문, pp.188~189.

79) 박태윤의 논문에서는 ‘남북저작권신탁관리회사’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필자는 ‘남북저작권신탁관리공사’로 해야 맞다고 본다.

80) 박태윤, 앞의 논문, p.107.

독, 계약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의 분쟁해결 대행기능 수행, 북한의 저작권 교육과 홍보, 북한에 저작권전문가의 파견 및 저작권전문가 양성, 무역관세 절감, 저작자의 사실 확인, 보호기간 선정, 자료의 수집, 전시 및 인적교류 이행, 남북통일 이후 저작재산권 상속분쟁 미연 방지, 남북저작권 관련 직통전화 운영, 남북한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공탁소 운영,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에 따른 이중계약 방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V.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글에서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살펴본 이유도 이 분야가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형적인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지적재산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법이념을 기준으로 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법이란 한 사회의 체제 및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그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지적재산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다 하여도 사회주의 체제 자체 내정하는 변형과 그 존재모습을 이해하는 데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⁸²⁾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우선 북한의 저작권법은 단순하게 기초만을 세운 것으로 창작자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인정 및 권리의 이용 허용 및 침해시 규제 등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 경제 근거, 단체 명의 및 기관 저작권 보호 위주, 정보화시대에 대처 미약, 국제 저작권 조약 미가입 등이며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문이 많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북한의 저작권법은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남한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반면 다른 점도

81) 위의 논문, p.108.

82) 육소영, 앞의 논문, p.227.

상당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남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에 충실하려고 그 보호와 제한 간의 한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 저작권법은 이와 달리 포괄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남한 저작권법과 크게 다른 점은 출판권 설정 제도, 저작권 등록, 저작권 집중 관리제도 등이 없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시점부터이며 미공표 저작물은 재산적 차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북한의 저작권법은 개인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국가적인 이익 보호 차원 성격이 짙다. 북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 즉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 마련 및 실행이 없다면 이 저작권법은 대외용 및 선전용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⁸³⁾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변혁과 이에 따른 북한의 개방정책은 북한 지적재산권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이 최근 추구하고 있는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과 지식의 보호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근간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이며, 이러한 경제체제 내에서 외국의 기술과 지식의 보호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둘째,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경험하였으며, 중국도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앞서 시장경제로의 개방을 경험하였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방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⁸⁴⁾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앞으로 남북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나 그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현정부에서는 적어도) 현상유지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⁸⁵⁾ 따라서 남한

83) 박태윤, 앞의 논문, p.110.

84)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p.5.

85) 현재의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남북의 특수관계의 설정은 남북한의 특수한 이중적 관계를 반영한 개념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의 성격은 전통 국제법 이론상 설명하기 어려

에서 북한법과 관련한 법의 해석이나 북한 측이 이해관계 당사자로 관련이 되어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분단의 현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북한법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되 가능한 한 장차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⁸⁶⁾

북한 저작물의 보호정책은 남북문화교류 차원에서 남북통일의 큰 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교류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원칙과 방향 속에서 북한 저작권의 보호도 정착되어야 한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헌법 제3조의 당위성에만 입각하여 무조건적으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저작물의 보호문제는 대북정책 속에서 남북통일이라는 큰 틀을 기초로 하여 다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⁸⁷⁾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이루어 냄으로써 앞서 본 여러 애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⁸⁸⁾

[논문투고일 : 2009. 11. 16, 논문심사일 : 2009. 12. 15, 게재확정일 : 2009. 12. 23]

㉠ **주제어** 북한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저작권 교류, 저작권 분쟁, 베른협약, 저작권조약, WIPO, TRIPs

은 분단국 특유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통 국제법이론으로는 분단국의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분단국의 특수관계는 분단국의 특유한 관계로서 통일지향적인 동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86)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앞의 논문, pp.129~130.

87) 박태운, 앞의 논문, p.112.

88)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앞의 논문, p.130.

부록 <표> 북한 저작물 분쟁사례

연도 \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991	북한 사회과학원이 펴낸 ‘리조실록’을 남한 출판사가 무단 복제하여 출판한데 대해 북한측 항의문 보냄	
1996	국내 출판업자에 의해 북한측으로부터 판권 계약이 된 북한 ‘리조실록’ 번역본을 국내 다른 업체가 무단복제 판매함. 국내 저작권법이 북한에 미친다는 법원 판결로 무단 복제한 출판사에 유죄 판결	법원판례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1999	북한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알뜰한 당신’, ‘변지없는 주막’ 등 1천여 대중가요의 북한 저작권 소유 주장. 사죄와 보상 요구	
1999	S 영화감독, 자신이 북에서 제작한 ‘불가사리’와 ‘사랑사랑 내사랑’의 M 방송사 방영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M 방송사를 상대로 방영금지 소송. 서울고등법원-S씨 제작 영상물의 저작권산권을 북한 영화제작소로 인정. 단, S씨의 저작권격권은 인정함(1999.10).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에 의거하여 북한 당국의 저작권을 인정
2000	일본의 북한 음반 저작권 관리회사 M사의 관계자가 방한하여 국내 S음반과 D기획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기러기떼 날으네’, ‘휘파람’ 등의 북한가요가 저작권료 지급 없이 유통되고 있는데 항의	
2000	공연기획사 C사가 “평양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북한측과 먼저 계약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측과 따로 계약하였다”하여 북한측과 남한정부, 방송국을 상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	재판부는 “C사측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하여 신청을 기각
2000	북한 출판물을 한국에서 발행해 온 A사는 자사가 북한으로부터 판권을 받은 북한판 ‘동의보감’을 B사가 무단 이용하여 피해를 보았다 하여 B사를 고소	북한의 계약 인정 못 받아 검찰 ‘공소권 없음’ 결정 내림
2001	북한영화 ‘살아있는 영혼들’의 동아시아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K필름이 국내 J일보가 동 영화를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무단게재하였다고 하여 J일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 출처: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tc_45.php3; 박대윤,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p.51.

참고문헌

- 「‘南北基本合意書’ 解説」, 통일원, 1992.
- 「문예예술사전」, 과학백과출판사, 1972.
- 「북한개요 2000」, 통일부, 1999.
-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91.
- 김상호,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 디터 블루멘비츠(저), 최창동(편), 「분단국가의 법적지위」, 법률행정연구원, 1996.
- 법무부, 「독일 법률·사법통합 개관」, 법무부, 1992.
-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 이찬주, 「북한의 문예정책」, 통일로, 1998.7.
- 장명봉 편, 「2008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0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 권영민, “북한의 출판과 남북출판교류의 방향”, 출판문화, 1992.1.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성”, 「법학연구」 제11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김성중, “재북 저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제4호, 세창출판사, 1996.
-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조」 통권 제607호, 법조협회, 2007.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제26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 박상미, “남북한 출판물 교류를 위한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9권 제1호, 출판문화학회, 2001.
- 박태윤, “남북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고찰-”, 연세

대 석사논문, 2002.

박현숙, “월북자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년 봄호.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육소영, “남북한의 저작권 보호체제와 북한 저작물에 관한 법적 문제점”,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법원행정처, 2005.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연구」 제3호, 북한법연구회, 2000.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북한법연구회, 2003.

이은정, “남북교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법원행정처, 2002.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년 봄호.

이장희, “남북한 학술교류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년 겨울호.

장명봉,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문제”, 「법학논총」 제10집, 국민대 법학연구소,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연구자료 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12.

전영선,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 「아태지역동향」 제159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정분희,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조수선, “남북한 저작권 협력 문제를 위한 단계별 정책방안”, 「북한학보」 제25호, 북한학회, 2000.

한승헌, “남북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 상호보호 방안”,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년 겨울호.

대법원 판결 2003.5.13. 선고 2003도604.

대법원 판결 1990.9.28. 89누6396.

법원 판결 1990.9.28. 89누6396.

서울민사지법 판결 1989.7.26. 89카3962.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결 1994.2.14. 93카합2009.

서울지법 판결 1996.9.12. 96노3819.

서울지법 판결 1998.7.26. 89카13692.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홈페이지(<http://www.interkorea.org>, 검색일자: 2009
년 11월 5일).

법제처 사이트(<http://www.moleg.go.kr/>, 검색일자: 2009년 11월 4일).

**Abstract**

North Korean Copyright Law & Use and Issues of
North Korean Literary Works in South Korea

Eun-Suk, Choi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invention, trademark, and copyright is evaluated as valuable as the tangible property like real estate. As the inter-Korean exchange will be resumed and vitalized in the future, the exchange of literary works will be increased gradually along with commodities trade. The North Korean materials, which were limitedly brought in the South by certain qualified brokers due to increased inter-Korean exchanges, are now available for anyone or any organization to obtain and display in the South after following a prescribed procedure.

Thus, it is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has raised the copyright issue on its literary works as various of them are brought into and sold in the South. Especially, as North Korea enacted 'Copyright Law' in April, 2001, revised it in February, 2006, and signed the Berne Treaty in April, 2003, the copyright dispute on North Korean literary works has been raised as a major issu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is thesis, the part II carries actual condi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in North Korea, and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related legislations. The part III studies legal issues for using North Korean literary works in the South, and standpoints of local courts on North Korean literary works. The part IV compares and analyses copyright-related legislations of both

Koreas, and seeks ways to exchange and cooperate South-North Korean copyright issues. Lastly, the part V will conclude the study by placing a solid conclusion.

**Key words**

North Korean Copyright Law, 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Exchange, Copyright Dispute, Berne Treaty, Copyright Treaty, WIPO, TRIPs